

정치학의 율곡 켜안기*

윤대식(한국외대)

I. 조선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변인 찾기

조선(朝鮮)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역사 속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왕조 중 하나인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를 규정하는 정체성인지 아직도 알 수 없다. 즉 망국(亡國)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서 청산되어야 할 구태의연한 질서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영향을 주고 있는 근원적인 힘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조선과 대한 제국의 멸망을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한 병합, 국치로 표현하는 관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왕조로서 조선은 멸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준으로서 조선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서적인 이해를 통해 조선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상 조선에 대해 아는 바가 그다지 많지 않은 혼돈에 놓여 있다.

만약 조선이 멸망한 왕조라면 조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학적 호기심과 역사적 반추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반면 우리의 실존양식

* 최진홍, 『법과 소통의 정치』(이학사, 2009)에 대한 서평.

을 규정하는 근원적 힘이라면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적어도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왜 조선의 그늘 또는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을 지속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일이다. 이로부터 조선은 그토록 오랜 기간 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었던 건강성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그 건강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최진홍 박사의 『법과 소통의 정치』는 그 단서를 제공한다.

이 책이 지닌 미덕은 저자의 문제의식(서론)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 저자는 기존 율곡의 경세론 연구방법이 경학중심적 해석과 연구에 치중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율곡의 정치적 사고에 주목한다. 그것은 조선의 정치현실에서 출발하는 율곡의 문제의식이 표상된 경세론을 정치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로 보는 저자 자신의 문제의식으로 표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저자는 율곡의 ‘말’을 빌어 율곡의 정치관을 조망하고 그의 전철학적-전성리학적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율곡이해와 결별한다. 이 대담한 계획의 중심에는 율곡이 사용한 ‘폐’(弊)의 용어가 자리하고 있다. 이로부터 폐법과 폐정의 개념화와 이를 고민하고 해결할 대안의 제시에서 율곡 정치철학의 본질을 찾는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율곡 정치철학의 언어적 표상으로 ‘폐’를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러한 저자의 문제의식 그 자체가 이 책의 미덕이자 논쟁거리인 셈이다.

II. 울곡의 정치적 사고는 역사와 현실의 응변(應變)

저자는 울곡의 정치적 사고가 그의 관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이로부터 경학중심적인 울곡이해를 생략하고 곧바로 울곡이 직면했던 정치적 고민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것은 저자가 울곡의 관직활동(1장 유폐개혁), 즉 정치참여를 세 단계로 구분함으로써 왜 울곡의 정치철학이 현실정치와의 조응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또한 그것은 저자가 취하는 과감한 인식론의 생략과 일관되게 울곡의 문제의식이 현실의 병리현상에 대한 진단에서 비롯되었음을 반영한다. 바로 울곡이 사용한 정치적 언어로서 ‘폐’이다.

도대체 울곡은 무엇을 병(病)으로서 ‘폐’로 규정한 것일까? 그것은 문정 왕후의 수렴청정이 드리운 그늘, 즉 권간(權姦)의 전횡으로 인해 무너진 공적 영역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정치영역의 마비증상- 정치의 사사화-이다. 울곡의 문제의식은 정치의 사사화(‘폐법’)로 인해 공적 영역의 소통-공론-이 봉쇄되어 민생의 붕괴와 상실(‘폐정’)을 결과함으로써 정치적 위기에 놓였다는 역사와 현실의 인식에 기초한다. 울곡은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태조가 창업하고 세종이 수성하여 처음에는 경제육전을 쓰다가 성종조에 이르러 경국대전을 간행했다. 그 뒤로도 수시로 입법하여 기록을 쌓아나가라고 일렀다... 연산이 황란하여 용도가 사치스럽고 번잡해지자 조종의 공납법을 고쳐 날로 아래로 손해를 가져오고 위로만 보태 주기를 일삼았다. 종종 반정 후에 마땅히 옛 제도로 돌이켜야 했지만 처음에 나라를 맡은 자가 다만 공신으로 무식한 자들뿐이었다. 그 후 기묘년의 여러 현자들이 자못 뜻을 두어 하려고 했으나 참소의 칼날을 만나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이어서 을사사화는 기묘사화의 경우보다 더 참혹했다”(「萬言封事」)고 설명했다. 이로부터 울곡은 조선의 통치기제가 본질로부터 일

탈되었음을 전제하고 그 ‘남겨진 병폐’의 개혁이 시급한 역사적 과제일 수밖에 없으며 그 척결을 위해 권간의 처단을 논리적 출발점으로 한다(1절 과거청산). 이러한 절박함으로부터 출발한 율곡의 정치적 위기의식은 그가 현실정치의 난전(亂戰)에 직접 뛰어 들어가게 될 실천적인 모습을 예단한다. 왜 이렇게 절박했을까? 저자는 율곡에게 정치의 영역이 이해득실이 아닌 시비(是非)의 영역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율곡에게 현실정치는 부정한(unjust) 정치이며 올바른 정치로 복귀해야 하는 당위의 대상이었기에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4절 있어야 할 정치와 현재 있는 정치), 궁극적으로 국가의 기강과 명분 회복(國是)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2. 을사위훈 삭제: 공론과 국시). 결국 사사화 된 정치의 유산(遺弊)은 청산되어야 하며, 그 청산은 소통-공론-의 기제를 회복하는 것이 된다(2절 권간과 유폐).

Ⅲ. 유폐개혁의 핵심은 법(法)에 의한 지배의 회복

만약 유폐의 개혁이 국시의 정립을 의미한다면, 유폐개혁과 국시정립은 동일한 명제인 셈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율곡의 정치적 사고를 이해하는 지표를 제공한다. 그것은 율곡의 정치적 언어로서 ‘종본이언’과 ‘종사이언’이고, 당위와 이해의 구별을 가능케 하는 기준이다. 저자는 양자가 순환적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즉 올바른 정치로서 국시의 정립이라는 종본이언은 유폐개혁이라는 실천으로서 종사이언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이다(2장 민생과 폐법). 그렇다면 국시의 정립을 위한 실천대안은 무엇일까? ‘종사이언’은 폐법의 개혁이다.

저자는 법의 폐단을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한 율곡의 정치적 사고야말로

현실정치 속에서 솟아난 리얼한 결과물이자 당대의 위정자와 차별화되는 분기점으로 파악한다(2장 민생과 폐법). 즉 왕정의 이상에 이르는 최종적인 규범화의 단계에서 도덕적 교화에 초점을 맞춘 성리학적 교의와 달리 울곡의 전성리학적 정치교의는 법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법제와 금령의 근본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풍속을 도탑게 하는 데 있다”(『日知錄』)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법에 의한 지배의 여부가 신민의 생존과 편의의 보장이라는 정치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정치적 삶의 본질을 울곡이 명확히 이해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 첫 단계로 울곡은 위정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강조한다(1절 폐법론/2절 폐법개혁론). 이 대목에서 “예와 법은 시대의 추세에 따라 정해야 하며 제도와 명령은 각기 사회상황에 따라야 하며 무기·갑옷·기구·설비 등은 각기 그 사용에 편리해야 한다”(『商君書』)는 법가의 인시제의(因時制宜)적인 역사관에서 비쳐지는 동일한 인상을 받는다. 그의 역사인식이 변환과 시의에 주목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폐법’은 ‘악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의 무책임함에 기인한다는 울곡의 판단은 “법이 통행되지 못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이것을 위반하기 때문”(法之不行, 自上犯之)이라는 상양(商鞅)의 언명을 연상시킨다. 즉 울곡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법제가 더 이상 시세와 맞지 않았던 원인으로 법과 제도 자체보다 법제를 운용하는 자들의 무능력과 사욕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입법했다 하더라도 현명한 자손이 있어 변통함이 없다면 마침내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萬言封事」)으로 정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조종성현으로서 법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는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변혁의 대상이 조종의 법제 자체가 아니라 이로부터 발생한 폐단의 개선이라는 변통의 개념을 암시한다(2절 1. 법과 시의). 이제 그 개선의 대상은 명백해진다. 군정, 조세, 향약의 폐단을 개선하는 것이 폐법

개혁의 증점과제였던 것이다(1절 2. 폐법과 민생).

여기에서 관건은 폐법의 대상과 개혁의 필요성이 아니라 이를 실천해서 국사를 정립할 의지의 여부이다. 그 의지와 실천성을 가진 자는 현실정치에서 오직 군주밖에 없으며, 군주의 수신이 핵심이다. 율곡은 군주의 수신이 안민(安民)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한다(2절 2. 율곡의 개혁안). 저자는 율곡의 정치적 사고, 더 나아가 정치철학의 목적이 바로 안민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민의 실현이 정치의 본질이고 이로부터 율곡에게 정치는 ‘사람과 법의 만남’으로 집약된다는 것이다. 좋은 사람(good man)이라는 교화의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법의 적용이 현실에서 요구되고, 교화의 성취를 방해하는 폐법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정(政)인 것이다. 군주의 수신은 이 역할 수행을 위한 의무이며 그 시의적절함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야말로 ‘소통’인 셈이다(3절 안민론). 드디어 저자가 율곡의 정치철학에서 밝히려 했던 주제로서 법과 정치의 소통이 등장한다(4절 법과 정치).

IV. 폐정의 개혁은 법과 사람이 만나는 장으로서 정치의 회복을 의미

법과 정치의 소통이란 무엇일까? 저자는 율곡의 정치관을 ‘인간들에 의한 법의 활용’이었다고 파악한다(3장 소통과 폐정). 그것은 성리학자로서 율곡이 아닌 경세가로서 율곡을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정치를 이상(理想)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인 경세가로서 율곡의 정체성 확인은 그의 정치적 사고가 현실에 투영될 시간을 허락받지 못했다는 저자의 안타까움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저자는 폐정개혁론이 제기된 시점이 율곡

의 말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로 인해 비록 우연의 일치일지라도 울곡의 정치적 사고는 당위와 이해의 구별로부터 본말과 선후의 관계로 전이되고, 중본이언을 강조했던 울곡의 정치관 역시 종사이언으로 경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3) 진시사소). 그것은 정치의 출발을 군주의 수신에서 법제의 개혁으로 바꾸었음을 의미한다. 즉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울곡이 ‘폐’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수 있다.

그런데 울곡의 폐정개혁론이 법제의 개혁으로부터 그 출발점을 지닌다는 이러한 가정은 울곡의 경세론을 정치공학(political engineering)으로 이해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과연 그런 것일까? 현실정치와의 끊임없는 조응 속에서 형성된 울곡의 정치적 사고가 단순히 문제해결의 공학적 기제를 제기하는 것에 머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있어야 할 정치’의 회복과 ‘현재의 정치’개혁에 대한 울곡의 기획 중심에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수신에 성공한 ‘군주’와 ‘인재’가 자리하고 있다(화조정).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회복은 시간과 물리적 제도의 작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양자의 소통여부에 달려 있으며 그 결과로서 공론(公論) 형성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왜 공론으로 귀결되는 것일까? 이 부분이 울곡의 문제의식과 저자의 문제의식 간 접점이다. 울곡이 던진 문제의식, 즉 폐법과 폐정은 왜곡된 공론정치가 가져온 결과물이라는 저자의 분석은 ‘논’과 ‘의’를 구별함으로써 독자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열었다. 저자는 논=결론=시비의 문제와 의=과정=득실의 문제로 구별하고 의정부의 기능약화와 삼사의 권한강화라는 당시 정치 지형도로부터 의정부가 담당하는 ‘의’의 실종과 삼사가 제기하는 ‘논’의 독존을 통해 공론정치가 시비의 문제로 왜곡되었다고 해석한다(3절 공론문제비판과 봉당론). 대단히 독특한 해석의 태도를 취하는데, 성리학

자로서 율곡을 거부한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은 논의 우월성으로부터 논의의 우선성을 지키려는 정치적 인간의 노력이라는 저자의 평가 역시 과정으로 정치를 이해한 율곡의 정치관을 밝혀주며 왜 본말과 선후로 전이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그것은 시의를 강조한 법제의 개혁조차 ‘의’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폐정개혁론이 공학적 대안이 아니라는 전말을 이해하게 한다.

그렇다면 폐정개혁을 위한 해법은 자명해진다. 정치영역의 사적 전횡과 의론의 경색을 가져온 문제점을 타파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을 위해 율곡이 설정한 개념이 변통일 것이다. 변통은 곧 “근본을 붙들어 혼탁한 것을 환기 각성시키고 인습을 깨끗이 씻어서 오랜 폐단을 개혁하며 선왕이 남긴 뜻을 잘 계승하여 일대의 규모를 바꾸는” 경장(更張)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율곡은 시대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군주의 책무 인지와 이행을 요구할 수 있었다(4절 소통과 정치). 폐법과 폐정개혁의 결론으로서 경장론은 그 실현여부에 상관없이 조선의 통치기제를 유지하는 기초체력으로 작동한 개혁론자들의 열망과 노력의 결정물이다. 율곡의 경장론 역시 그 한 사례이며, 조선은 이러한 개혁론자들의 존재와 정치적 사고에 의해 통치기제의 건강성을 유지했던 셈이다.

V. 후 기

저자는 마지막에 율곡 정치철학을 구성하는 두 축 중 하나인 사람, 특히 군주의 수신문제를 ‘군도론’으로 할애한다(4장 민생과 소통의 관점에서 본 군도론). 그것은 수신영역의 보급을 위해 율곡의 인식론과 불가피하게 조우한다. 물론 저자 자신도 밝혔듯이 율곡의 이기론과 심성론은 군주의 수신을 위

한 방편으로 제시된 설명일 것이다(이기론과 심성론). 또한 결론에서 드러나듯이 율곡의 정치적 사고의 우선적인 대상은 ‘나라 그 자체가 아니라 나라가 되는 것’, 즉 정치과정에 대한 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율곡을 비롯한 당시 정치참여자 모두에게 ‘나라 그 자체’는 군주로 국한될 테지만, ‘나라가 되는 것’은 군주와 그 자신들뿐 아니라 민(民)까지도 포섭하는 것이다. 율곡의 정치적 사고가 가리키는 방향이 안민(安民)에 있다는 저자의 지적이야말로 율곡과 저자 모두가 말하고 싶었던 그들만의 정치적 이상상이기도 하다.